



[2020 밀레니얼이 온다] 비싸도 내가 좋으면 OK 소비트렌드 변혁 주도 04



Life

[라이프] '마이 펫'을 부탁해 보험부터 신탁까지 평생 동반금융 L4



3년연속 '인기정책' 역세권 청년주택 부족한 2%는 고가 임대료에 14㎡, 좁은 주거공간 '옥의 티'

2019년 시민들은 '서울시 10대 뉴스'로 친환경 교통수단 따름이, 공공 와이파이 S-Net 구축, 돌봄 SOS센터 확충,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활동,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설치, 미세먼지 정책,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 등을 꼽았다. 이 중 3년 연속 10위권에 안착한 체감도 높은 정책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의 주요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2017년 서울시가 10대 뉴스를 선정한 이래로 매년 순위권에 이름을 올린 생활밀착형 정책이다.

시는 서울시의 주요정책 30개를 대상으로 순위와 관계없이 1인당 최대 3개까지 선택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해왔다. 온·오프라인 투표를 실시한 첫해에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은 총 투표수 17만9290표 중 4.2%인 7454표를 획득해 6위를 기록했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총 투표수 28만5400표 가운데 4.3%인 1만2146표를 얻어 7위를 달성했다.

지난해 '2019 서울시 10대 뉴스' 시민 투표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총 투표수 31만8268표 중 1만3972표



양재역 인근에 들어서는 역세권 청년주택 투시도. /서울시

청년·신혼부부위한 주택비중 최대 70%, 임대료 절반 공급

시의회 "계획대비 실적 부진" 3년간 목표달성 절반 못미쳐

(4.4%)를 받아 7위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2030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해왔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그동안 역세권 청년주택과 관련해 ▲

고가의 임대료 책정 ▲초기투자비 회수 장기화에 따른 사업 참여율 저조 ▲14㎡내외의 비좁은 주거 공간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시는 사업 시행 3년차를 맞아 지난해 11월 주변 시세의 50% 이하로 공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비중을 대폭 늘리고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분양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내놨다.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청년·신혼 부부를 위한 주택의 비중을 40~70%까지 늘리고 이를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체 물량의 20%만 주변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하고 나머지 민간임대 주택은 주변시세의 85~95% 수준으로 공급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시는 개선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SH 선매입형'과 '일부 분양형'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SH 선매입형'은 민간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주택연면적의 30%를 SH공사 선매입하는 방식이다. 주변 시세의 30% 이하 임대료로 공급되는 물량이 전체의 20%(공공 20%), 시세의 절반 이하로 공급되는 물량이 50%(선매입 30%+민간 특별공급 20%)로 전체 물량의 70%가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될 수 있다.

'일부 분양형'은 주택연면적의 최대 30%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총 주택물량의 40%(기존 공공 주택 20%+민간 특별공급 20%)를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5평 논란'을 불러일으킨 주거 여건

도 개선했다. 1인 청년 주거면적은 14㎡에서 최대 20㎡로, 신혼부부용은 30㎡에서 최대 40㎡로 전용면적을 각각 6㎡, 10㎡ 확대했다.

시의회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하다"며 "이러한 공급 현황은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불러오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는 지난 2018년 향후 5년간 5조 3074억원을 투입해 공격적임대주택 24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 물량은 8만호다.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목표' 계획을 보면 시는 2019년까지 총 3만8000호를 공급했어야 한다.

지난 3년간 시는 43개소에 1만7000호 공급(인가 기준)을 완료한 상태다. 목표 달성률은 44.74%로 당초 공급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의회의는 "명확한 규제 완화 기준의 객관성도 갖추지 못한 채 완화가 이뤄지는 것은 절대 지양해야 한다"며 "공공 임대주택 공급 정책의 주안점은 주택 가격 안정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새해 첫날 경복궁 풍경 2020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경복궁이 시민, 외국인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경자년 달라지는 서울생활 58가지 '꿀팁'

녹색순환버스·신혼부부 주거지원

단독주택 등 재활용품 정책 전환 자연재난 보상금 최대 1000만원

서울 도심을 순환하는 녹색순환버스가 경자년 새해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노선은 총 4개이며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의 반값인 600원이다.

청년수당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단독주택과 상가 지역의 재활용품 수거정책도 바뀐다.

또 서울시민 누구나 자연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으면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과 제도, 정책을 소개하는 '2020 달라지는 서울 생활'을 펴낸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1월부터 서울도심 주요지점을 잇는 '녹색순환버스'의 운영을 시작한다. 도심외부순환, 도심내부순환, 남산순환, 남산연계 노선 등 총 4개 노선이다. 운임은 일반 시내버스의 절반인 600원이다.

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고 대출금의 이자 일부도 지원해준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의 기준소득을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 이하(도시근로자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완화한다. 이자지원 금리는 대출금의 최대 3.0% 이내로 확대하고 이자지원 기간도 최장 10년까지로 늘린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프로그램 대상 인원은 3만 명으로 늘어난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재활용품 수거 정책도 바뀐다. 7월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과 상가는 목요일에 폐비닐만 배출해야 한다.

새해부터는 시민안전보험도 적용된다.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은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NH농협손해보험)에서 최대 1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7 | 해질 / 17:25

1월 2일 (목) 음력 : 12월 8일

수도권 날씨 **-2 ~ -4°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연천 -5/4, 동두천 -4/4, 가평 -5/4, 양평 -4/4, 용인 0/5, 평택 -3/5, 인천 -1/4, 수원 0/5, 파주 -6/4, 서울 -2/4, 백령도 1/5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서울시 '거리모니터링단' 29만건 신고접수 (8년간)

총 5191명 봉사활동 자발적 참여

서울시는 보행환경 불편사항을 찾아내는 '거리모니터링단' 총 5191명을 통해 지난 8년간 28만6689건의 신고를 접수받았다고 1일 밝혔다.

거리모니터링단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시민들이다. 이들은 보도블록 파손, 물고

임, 보행장애물 적치 등 일상생활 중 발견한 보행 불편사항을 신고해 안전한 거리를 만드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신고 유형별로 보면 보도블록 파손이 3만3145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도로 시설물(6573건), 치수방재(4557건), 도로포장(2856건), 공사 중 불편(1380건)이 뒤를 이었다. 불법 주차, 불법 광고물, 소음, 무단쓰레기 투기 등 기타

신고 건수는 23만8178건이었다.

지난해에는 총 625명의 거리모니터링단원이 보행 불편사항 3만8279건을 발굴해냈다. 공사장 불편이 1만2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는 올해에도 거리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 시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서울시 보행정책과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응시원서는 서울시와 각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